

상시적인 지출효율화 체계 구축을 통해 ‘재정혁신 성과 극대화’에 총력

- 임기근 직무대행, 「재정구조 혁신 T/F」 제2차 점검회의 개최
- ①연금·보험 부정수급 방지, ②건강보험 재정안정화, ③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개편, ④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논의
- 재정사업 성과평가 개편방안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1월 내, 예비 타당성조사 개편방안은 2월 중 발표하는 등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

기획예산처는 1.22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작업반별로 구체적인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 :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주재), 재경부·교육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국토부·중기부·성평등부 등 9개 부처, 작업반별 민간전문가 등

재정구조 혁신 T/F는 작년 9월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 및 재정-경제 선순환 구축의 추진체계로서 출범하였다. 지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세제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운영 중이며, 각 작업반에서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체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먼저,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기존 단발성 구조조정을 넘어 상시 지출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과제 상시 발굴 및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편성 시기(6~8월)에 단년도 지출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지출구조조정에서 탈피하여, 다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사업구조·제도 개편, 지방정부·민간 역할 강화 등 제도개선 동반으로 효율화 방안 도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중기 시계에서 근본적인 지출구조를 개편 중에 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 또는 국민관심도가 높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 체계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사회안전망이 촘촘해지고 혜택도 많아짐에 따라 부정수급 유인도 증가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으로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의 부정수급 관리는 강화된 반면, 공적연금·사회보험은 개별적으로 운영돼 부정수급 환수·처벌규정간 현격한 차이가 있어 왔다. 이에 형평성 제고를 위해 ①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 ②정보 공유·연계 등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체계 구축, ③유사 사례공유 등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강화, ④부정수급 방지 교육 합동실시 등을 전반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서도 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정수급 여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①사업장 점검 강화, ②건강보험 등 관계기관 정보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산재보험은 부정수급 예방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①신청패턴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탐지 기능 강화, ②산재 심사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요양보험은 ①적정청구관리시스템(Fair Detection System, FDS) 활용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②현지조사 및 자율점검 확대 등을 토대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건강보험은 합리적인 건강보험 이용을 유도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외래진료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①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차등기준 확대, ②비급여 관리 강화, ③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④가입자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및 중증화 방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병렬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 지원방식과 기준 등을 재구조화하여 정책 수요자의 체감도와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와함께, 교육부, 복지부, 성평등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관된 지원기준을 검토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월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금년부터 ①이월 요건 강화, ②보조사업 이월·재이월시 보조금 시스템 등록 의무화 등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우선, ①재정사업 성과평가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평가방식·항목 등을 전면 개편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체계적으로 환류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②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유형에 맞는 적정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재검토하여, 도로·철도, 문화·관광, 정보화 등 사업 유형별 특수성 및 지역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③민간투자의 경우에는 대상시설을 다양화하고, 민자사업의 비용·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추진절차를 가속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고혁신반은 기 발표된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①정부자산 헐값매각 우려 해소를 위해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절차 신설, 감정가 미만 매각의 원칙적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령 개정과, ②국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를 위한 체납실태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채권법령 정비를 '26년 상반기 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세제혁신반은 키포프 회의 이후 재정·세제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조세지출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①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 구체화와 ②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환류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의 일관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조세특례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이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각 작업반별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적극재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소는 과감히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구조 혁신 과제들이 모든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찬성과 만족을 이끌어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대안을 국민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향후 각 작업반별 논의를 지속하여 그 운영 성과를 '27년도 예산안 및 '26~'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과제의 시급성·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조규산 (044-214-1810)	
		담당자	사무관	김진영 (jeanghim@korea.kr)	
	재정기획분석과	책임자	팀 장	김남희 (044-214-1850)	
		담당자	사무관	김선화 (seonakim@korea.kr)	
	지출혁신과	책임자	과 장	오현경 (044-214-1870)	
		담당자	서기관	정운홍 (yoonhong@korea.kr)	
	예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민 (044-214-2330)	
		담당자	사무관	김유현 (janes0425@korea.kr)	
	재정성과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지원 (044-214-3210)	
		담당자	사무관	최우리 (woori19@korea.kr)	
	타당성심사과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214-3310)	
		담당자	사무관	조문경 (keepange188@korea.kr)	
	민간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대원 (044-214-3330)	
		담당자	사무관	박재홍 (jwpark1202@korea.kr)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동영 (044-215-5110)	
			담당자	사무관	서지연 (sjy2708@korea.kr)
		국유재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경구 (044-215-5150)
			담당자	서기관	강보형 (good1218@korea.kr)
조세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15-4140)		
	담당자	사무관	정운재 (94jyj1210@korea.kr)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책임자	과 장	이영기 (044-202-7349)		
		담당자	사무관	박병희 (naguknam@korea.kr)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원주 (044-202-8830)	
		담당자	사무관	최대훈 (impipower@korea.kr)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02-3490)	
		담당자	사무관	김준범 (kjb1844@korea.kr)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한숙 (044-202-2710)	
		담당자	서기관	이관형 (trytofly84@korea.kr)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yoona14@korea.kr)	